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협업 강화한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하였다.

- \* 불법제품 단속현황(건/적발률) : ('11) 532/11.6%, ('12) 617/13%, ('13)695/15.1%
- \*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건) : ('11) 20,732, ('12) 22,907, ('13) 24,312
- \* 주요 가전제품 화재현황(건) : ('11) 7,955, ('12) 7,981, ('13) 7,420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그리고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이다.

정부 3.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과제1.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 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 시와 다르게 불법제품을 제조, 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된 협업이다.

그간,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각각 수행해온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 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 C/S시스템 : 기존 불법제품 유통업체 정보 및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세관검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

양 부처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국경수비대(CBP)”는 세관에서 년 2천여 건 이상의 샘플 조사, '13년 상반기 678건 적발, 약 6백만개 제품 반송·폐기조치.

### 과제2. 제품사고조사 협업

두 번째 과제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하여 확보한 제품사고 및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이 해당제품의 리콜 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즉, 제품사고 시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과수”와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업을 통해, 실제 제품사고 원인을 안전 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과제3.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

세 번째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제품사고·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위해제품 단속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과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품안전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스마트 권슈머”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사고 다발 제품 등 제품 안전 정보를 습득하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문화를 생활화하고,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하여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의 네 가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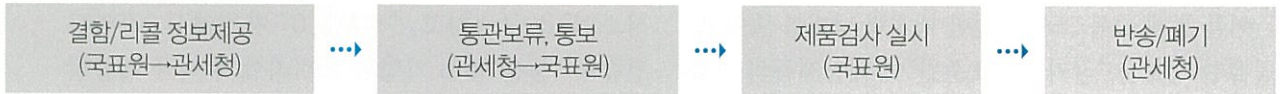




## 참고 1 협업방안 요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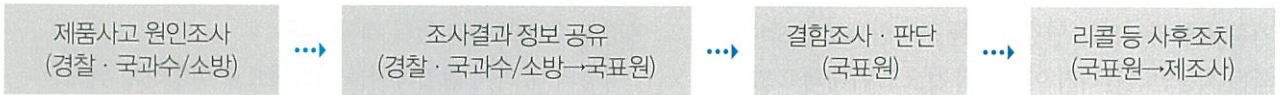
### [과제1] 수입제품 안전관리 (국표원 + 관세청)

- (국표원) 불법제품 수입자정보 관세청에 제공, 통관전 제품검사 수행
- (관세청) 불법제품의 통관보류 및 검사 요청, 반송·폐기 조치



### [과제2] 제품사고조사 (국표원 + 경찰청·국과수 + 소방청)

- (경찰·국과수/소방청) 화재시 발화원인·제품관련 정보를 “국표원”과 공유
- (국표원) 해당제품 결함 조사·판정 및 리콜 조치



### [과제3] 신고센터 연계 및 공동 안전성조사 (국표원 + 소비자원)

- (공정위/국표원) “제품결함·사고신고센터(국표원)”와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한국소비자원)”간 소비자 상담정보 연계
- (국표원/소비원) 조사 대상제품 발굴, 공동 조사·평가·발표 후 제도개선



### [과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표원+공정위·소비원+소방청+관세청)

- (전 기관) 국표원 주관으로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정보 공유, 국민에 제공

〈부처별 공유대상 정보〉

부처	공유대상
산업부(국표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조사 정보, 리콜정보, 제품인증정보 등
공정위(소비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소비자 위해정보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생활제품 사고발생 현황 및 통계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의 통관정보 (수입자, 통관 수량, 제품정보)



## 참고 2 수입제품 협업 체계도



### 향후 수입제품 선별방법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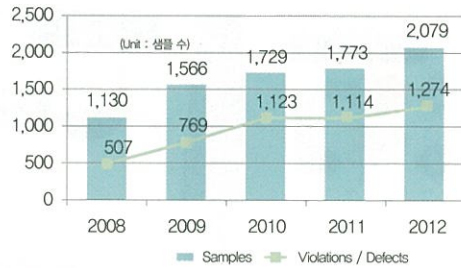
## 참고 3 미국, 수입제품 협업사례(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국경수비대(CBP))

- CPSC는 불법 수입제품의 사전 유통차단을 통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입물품 안전관리정책」 운영 중('09~)
  - \* '07년 12개 연방정부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수입안전 작업반이 구성되어 추진
- '08년 수입품 조사부서를 신설(20명 증원)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이행 중
  - ☞ '09년 6개 항구에서 시작하여 '13년 15개 항구로 확대
- 위험성평가기법(RAM)이 적용된 CPSC의 전산시스템과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ITDS)과 연계하여 조사 대상 수입제품 선별
  - \* RAM : Risk Assessment Methodology로 CPSC의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제품 중 고 리스크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는 평가방법론임



〈수입제품 단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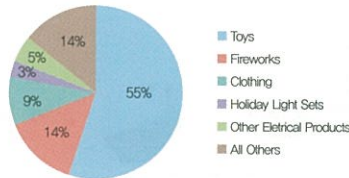
○ (단속건수) 연간 약 2천건 이상 검사 수행 ('12년 조사대비 적발율 약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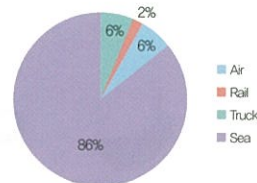
○ (단속제품 현황) 완구가 55%, 불꽃놀이제품 14% 등이며, 적발되는 제품의 수입경로는 항공이 86%로 대부분을 차지

\* 조사기간 : 2011. 10. 1 ~ 2013. 9. 5 약 2년

〈적발제품 현황〉



〈적발 구분〉



○ (단속구분) 주요 단속요인으로 납 등 유해물질 검출이 621건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전기적 요인이 338건으로 21%를 차지

참고 4 생활제품 화재 통계

(출처 :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방재청)

연간 전기제품 화재사고 건수

구분	2010년(비율)	2011년(비율)	2012년(비율)	2013년(비율)
주방기기	2,228 (26.9%)	2,043 (25.7%)	2,199 (27.6%)	2,106 (28.4%)
배선기구	2,101 (25.4%)	2,031 (25.5%)	2,116 (26.5%)	1,876 (25.3%)
계절용기기	1,501 (18.1%)	1,508 (19.0%)	1,637 (20.5%)	1,523 (20.5%)
조명·간판	1,134 (13.7%)	1,047 (13.2%)	875 (11.0%)	746 (10.1%)
전기설비	602 (7.3%)	663 (8.3%)	561 (7.0%)	520 (7.0%)
생활기기	397 (4.8%)	352 (4.4%)	383 (4.8%)	389 (5.2%)
영상음향기기	274 (3.3%)	266 (3.3%)	165 (2.1%)	210 (2.8%)
사무기기	45 (0.5%)	45 (0.6%)	45 (0.6%)	50 (0.7%)
계(건)	8,282	7,955	7,981	7,420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4)